고법원장 줄사퇴… 법관인사 촉각

내달 5일 단행… 지법원장 일부도 용퇴할 듯
'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 승진 여부 주목
검찰도 내달 인사… 소폭·보직 순환 전망

광양출신인 이태운(62·사시16회)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한 고법원장 5명이 사의를 표명했거나 용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달 있을 법원의 정기 인사 규모가 역대 최대 폭이 될 전망이다. 인사의 계절을 맞아 검찰 인사의 폭과 규모도 관심이다.

◇지법원장 일부도 사직 가능성=법원 인사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가장 많은 법원장들이 한꺼번에 법복을 벗을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이 서울고법원장 외에 김관재(57·사시 17회) 광주고법원장, 이기중(57·사시 18회) 부산고법원장, 황영목(59·사시 18회) 대구고법원장 등 4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고, 박국수(63·사시 15회) 사법연수원장도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욱서(55·사시 18회) 대전고법원장과 손용근(58·사시 17회) 특허법원장이 차기 서울고법원장 또는 사법연수원장으로 거명된다.

법원 주변에서는 고법원장 외에도 지방법원장 일부가 물러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인사에서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난 2005년 9월 이래 사실상 가장 많은 법원장들의 동반사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일부도 사직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몇 명이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내달 5일께 법원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10~11일께 고법 부장, 22일 지법 부장 인사를 각각 단행할 예정이다.

고법 부장 승진인사는 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 중 몇 명이 사퇴하느냐와 공석 또는 겸직 중이거나 신설되는 고법 부장급 자리가 몇 개냐가 가장 큰 변수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광주고법 전주부에 고법 재판부가 1개 더 신설될 예정이어서 고법 부장 1명이 충원돼야 한다.

또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이 겸직 중인 서울가정법원장에 다른 인사가 보임될 경우 한자리가 더 늘어나며, 전국 지법 중 고법 부장이 맡는 수석부장판사 자리 3곳 가량이 공석이어서 이를 모두 채울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런 요인을 두루 감안하면 올해 고법 부장 승진자는 15~20명선으로 예상된다.

◇검찰도 2월 인사=통상 2월인 검찰의 정기인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번 인사의 폭과 규모에 검찰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10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점에서는 이의가 없는 분위기지만,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 시기나 폭, 규모 등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검찰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온 이귀남 법무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이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취임 후 내건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달 본격적인 새판짜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이 경우 법무부 실·국장과 대검 참모진,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이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대전고검 차장 자리가 공석이고, 사법연수원 13기 중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한 일부 검사장들이 물러나면 3~4석의 검사장 자리가 비기 때문에 검사장 승진 등 후속 인사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구체적인 그림도 제시됐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 취임을 전후한 작년 8월 이미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를 포함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터라, 불과 반년 만에 다시 대규모 자리이동을 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전 민주당 입당이 유력시되는 정동영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무등산 등반에 앞서 문빈정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서 지지자 결집 나선 정동영

어제 무등산행… 지방선거전 복당땐 호남 공천 영향 줄지 관심

초읽기에 들어간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이번 지방선거 호남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의원은 10일 광주·전남, 전북 지지자들과 무등산 산행을 함께 하면서 오는 6.2 지방선거 승리를 강조하는 등 세 몰이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양형일 전 국회의원과 한민족경제비전연구소, 시민포럼 새 물결,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등 3개 단체의 회원 등 500여 명과 함께 무등산 등반에 나섰다.

산행에 앞서 정 의원은 무등산 문빈정사 앞에서 자신의 민주당 복당 문제와 관련해 "이제 8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정세균 대표가 (복당) 날짜를 결정하면 그날 당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소수 몇 사람의 민주당이 아닌 중도와 개혁,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큰 민주당, 대동 민주당이 돼야 한다"면서 "특히 6월 지방선거는 진보와 개혁이 함께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기가 돼야 한다"고 지방선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역정가에서는 정 의원이 설(구정) 이전 민주당 복당이 실현될 경우,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양형일 전 국회의원 등 호남지역 DY계 출마 예정자들의 입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정 의원이 현재 당적이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아직 이렇다할 행보를 보이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지만, 정 의원이 복당하게 되면 빠르게 DY계가 힘을 결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 의원의 복당이 지방선거 당내 경선 이전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 민주당 내 DY계의 반발 등으로 민주당 내부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범야권 지방선거 공조 뜻대로 될까

성사땐 광주·전남서 민노당 단체장 나올수도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권이 이번주 지방선거 연대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 선거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의 각 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반(反)MB연대'가 절실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구체적인 연대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를 구성키로 하는 등 선거연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감대 형성=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선거 연대를 통해 승리한 뒤 지방정부를 공동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제1야당으로 기득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지난달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진보세력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진보대통합론을 제기했다. 민노당은 진보대통합 추진을 위한 당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12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시민사회 원로들과 지방선거 연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찬 모임을 갖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선거연합의 가능성과 조건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야권은 지방선거 연대를 위한 실무기구를 꾸릴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 영향은=선거연대의 주 대상지는 호남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 및 영남권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나라당의 강세가 뚜렷한 영남지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선거연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민주당이 제 1당인 광주·전남역에도 미약하나마 선거연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연대를 위해 지방의원의 15% 전략공천, 시민배심원제 도입 등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이미 만들었다. 따라서 기초단체장 극히 일부 지역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과의 선거연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권의 선거연대가 성공으로 귀결될지는 미지수다. 선거연대라는 총론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입장차가 확연하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연대의 중심에 서는 것에 대해 다른 정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여기에다 호남의 경우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경우 인물난을 겪고 있어 민주당과 동등한 자격으로 선거연대의 구도를 만들기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어 선거연대가 실현되기까지는 수없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원내 복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민주당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이 원내로 돌아온다.

이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악법 날치기를 비롯한 이명박 정권의 폭정에 맞서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 원내에 복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자유와 민주체제를 수호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원내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이라는 재야 원로인사와 시민단체, 선배 및 동료 의원들의 권유와 충고를 무조건 따르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의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본격화될 야권의 세종시 수정 저지 투쟁에 합류한 뒤 2월 임시국회부터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에서 본격 활동할 예정이다.

천 의원과 최 의원은 지난해 7월 미디어법 처리 직후,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말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 직후 각각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미디어법이 원천무효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장외에 머물러 왔다.

이들의 복귀로 지난 7월 미디어법 처리 후 함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던 정세균 대표의 거취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